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 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http://www.ccej.or.k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백인길 이사장)
- 문의 : 도시개혁센터(윤은주 간사, 02-3673-2147/dongi78@ccej.or.kr)
- 시행 : 2021. 12. 22. (총 22매)

[송현동 부지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오전 10:30~11:30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이견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견희 기증관 설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는 걷고 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4월 삼성에서 이견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이후에 이견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견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막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에 이견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견희 기증관 건립과 관련란 문제점과 쟁정들을 공론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방식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6.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 일 시 : 2021.12.22(수) 10:30~11:30

○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사회 : 최희진(술방울커먼즈)

○ 발언 : 박선영(문화연대),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윤은주(경실련)

○ 이견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이유1\_비정상적인 추진 속도와 사회적 공론화 부재

이유2\_문화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

이유3\_송현동 부지 매입 및 등가교환 과정의 문제점

이유4\_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과의 충돌과 모호한 기증관의 정체성

이유5\_시민의 공간으로서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와 충돌

이유6\_관광수입창출을 위한 경제적 효과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

이유7\_기증품의 검증과정 부재 및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

이유8\_이견희 명칭 사용의 적절성과 삼성 특혜 논란 의혹

## <기자회견 현장사진>



## <기자회견 자료>

#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 이유1\_비정상적인 추진 속도와 사회적 공론화 부재
- 이유2\_문화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
- 이유3\_송현동 부지 매입 및 등가교환 과정의 문제점
- 이유4\_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과의 충돌과 모호한 기증관의 정체성
- 이유5\_시민의 공간으로서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와 충돌
- 이유6\_관광수입창출을 위한 경제적 효과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
- 이유7\_기증품의 검증과정 부재 및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
- 이유8\_이건희 명칭 사용의 적절성과 삼성 특혜 논란 의혹

## 이유1\_비정상적인 추진 속도와 사회적 공론화 부재

- 2021년 4월 고 이건희 회장 소장품의 기증이 결정된 이후, 불과 일 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증관에 대한 구상,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 이건희 기증관은 연면적 30,000㎡ 규모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문화정책과의 연계성, 기증품에 대한 검증, 지역별 균형발전과의 연계성, 기증관의 지속가능성, 기증관의 시설/예산/인력/프로그램 등과 같은 운영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건립 예정지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역사/문화/사회적 가치에 대한 검토, 주변 권역에 대한 영향력과 효과,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
- 개인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문화시설에 대한 정체성, 이건희라는 개인의 명칭 사용, 기증품 매입 과정의 불투명성, 삼성에 대한 특혜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 역시 부재
- 지나치게 빠른 건립 추진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부재하며,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실상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대체하고 있음
- 대규모 시설건립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론화 부재에 대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이건희 기증관 건립 추진 일정>

2021년 4월 28일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소장품 2만3181점 기증
2021년 7월 7일	문체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발표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제시
2021년 7월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추진
2021년 11월 10일	문체부와 서울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로 송현동 최종 결정
2021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
2022년 하반기	국제설계 공모
2023년~	설계 및 공사
2027년	완공 및 개관

- 이는 국립문화시설 건립 절차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미비와도 연관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건희 기증관과 같이 설립 주체가 문체부인 경우, 협의 절차나 외부 검토 과정이 없이도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
- 그나마 협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도 사업계획서,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sup>1)</sup>등에 불과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검토가 불가능함
- 문체부는 이건희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총 10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 기증품 활용 주요 원칙과 활용방안 결정<sup>2)</sup>. 위원회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를 제안하고, 송현동 부지 최종 결정에도 심의·의결
- 위원회는 이견희 기증관 건립과 관련한 유일한 논의 구조이자 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적절성이나 논의 과정의 투명성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냄
- 문화연대는 이견희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여 차례 진행되었다는 회의에 대한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음. 하지만, 문체부 측은 설득력 없는 이유<sup>3)</sup>를 대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

2) 문체부 보도자료 2021.7.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근거로 대고 있음. 하지만, 이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① 이미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7.7)를 통해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②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 있고, 공공 위원회의 참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다.
- ③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결정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

○ 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미술과 문화재와 같은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음. 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논의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대표성 또한 문제가 있음

<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현직	주요경력	비고
김영나	서울대 미술사학과 명예교수	오하이오 주립대 미술사 박사 국립중앙박물관장	위원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인류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관광진흥비서관	
목수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신상철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프랑스 소르본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 이전 자문위원	
양현미	상명대 교수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 박사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장인경	철박물관 관장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협회장	
정연심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뉴욕대 미술사 박사 뉴욕주립대 FIT 교수	

※ 당연직 위원 :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현대미술관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지역문화정책관

고,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업무 수월성을 위한 정책 과정의 비공개 사이의 편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유2\_문화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

- 문화시설의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지적은 오래되어온 이슈. 전국 미술관 229곳(2017년 기준) 가운데 41%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음. 시·도별로는 서울 39곳, 경기 52곳, 인천 4곳인 반면 부산(6곳)과 대구(4곳), 광주(9곳), 대전(5곳) 등 광역시는 한 자릿수에 불과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고, 문체부 또한 문화균형발전이 주요 정책 기조임을 밝혀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도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서, 균등한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역별 현황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거점의 박물관·미술관 확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 문체부는 송현동 부지 선정에 접근성을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으나, 해외의 유명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접근성이 낮지만 높은 인지도와 방문객수를 기록하는 시설들이 있다는 점에서 꼭 수도권(서울)일 필요는 없다는 지적
  
- 이견희 기증관 유치전에 나섰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 박형준 부산시장,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느냐",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었고, 최소한 공모라도 해달라는 지역의 요구도 일거에 묵살했다. 한마디로 지역 국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역 무시와 오만 행정의 극치"
- 최형두(국민의힘) 비롯한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문체부는 '이견희 기증관 서울 유치결정' 즉각 취소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부터 거치라"고 요구하며 성명 발표
- 이에 문체부는 '지역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별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 무마용' 대응이라는 비판

## ■ 주요 유치 경쟁 현황

지역	근거	유치 장소	지자체 지원
대구광역시	이건희 회장 출생지 삼성상회 창업지	구 경북도청 터 (이건희 미술관, 보존센터,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음악분수, 잔디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국립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 조성)	미술관 건축비 2,500억원
부산광역시	균형발전, 기반시설 연계	부산 북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균형발전, 기반시설 연계	해운대구 현 청사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리적 이점		
대전광역시		옛 충남도청사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연계	인천뮤지엄파크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연계		
서울 용산구	이건희 회장 유족 거주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이건희 회장 묘소		
충남 서산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전남 여수시	이건희 회장이 자주 방문함	여수시 소라면 일대	
경남 의령군	이병철 회장 출생지		
경남 창원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연계	마산해양신도시 부지	



### 이유3\_송현동 부지 매입 및 등가교환 과정의 문제점

- 송현동부지는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수십 년간 활용.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 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 원에 매각
- 대한항공은 송현동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무리한 추진과정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 특히, 송현동 부지는 주변에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로 인해 고도 제한이 있고, 주변에 중고등학교 등이 있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호텔 건립이 어려운 부지였음
-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2020.6.5.)을 통해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 당시 서울시는 토지 보상비로 4,620억 원(시세 수준)을 책정하였으나 대한항공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쟁 입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려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공개 입찰 매각은 무산. 송현동 부지 매입가는 5,000억 원 정도로 예상
- 송현동 부지는 2021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762억원(1,013만원/m<sup>2</sup>)임.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의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다는 점에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함.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제 조치를 취해 옴.
-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 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음. 즉,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도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예산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되, 매각대금은 LH가 지급하고 서울시는 해당 보상액에 준하는 사유지를 LH에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 할 부지로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결정
- 문체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법제처에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
-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13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송현동부지에 이견희 기증관 건립 계획에 대해 정부가 무상으로 쓸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음
- 이에 대해, 문체부와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서 송현동부지와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등가교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용산구 용산공원 안 국유지,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동대문구 홍릉, 중구 남산 등에 있는 국유지 4곳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
- 문체부가 교환할 국유지 역시 지역의 맥락이나 상황,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하지만, 송현동 부지 이전을 위해서 이러한 측면들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부지로 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현동 부지와 교환을 확정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

<송현동 부지의 역사>

~1997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1997년	삼성생명 부지 매입 (1,400억원)
2008년 6월	대한항공 부지 매입 (2,900억원)
2010년 3월	관광호텔 사업 추진 (학교정화구역을 이유로 건립 불가)
2015년 8월	문화 체험공간 추진 (2017년 1월 사업 철회)
2019년 2월	한진그룹, 부지 매각 발표
2020년 2월	대한항공 이사회, 부지 매각 의결
5월	서울시, 문화공원 조성 추진
6월	서울시, 부지 보상비로 4,620억 원 책정. 대한항공 부지 매각 예비 입찰 (응모자 없음)
8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항공이 제기한 행정절차 중단 고충민원 논의 착수
10월	서울시, 공원 조성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정 의결 (결정고시 유보)
2021년 3월	권익위, 대한항공, 서울시 (LH와 등가교환 협의) 조정서 체결
8월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맞교환
9월~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진행 중
11월	이건희 기증관 건립지로 송현동 부지 결정 오세훈 시장-황희 문체부 장관,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 이유4\_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과의 충돌과 모호한 기증관의 정체성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에 의하면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기조 아래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 수행체계를 제정비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를 역설
- 이러한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견희 기증관 설립이 마치 독립적인 사업인 양 진행되고 있음
  
- 실제 문체부와 서울시 협약식에서 김영나 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학예실과 수장고 등 별개의 편제와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음. 미술계 한 중견 기획자는 “기증관으로 컬렉션을 모두 넘기고 직제와 수장고까지 새로 만들면,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은 예산·인력 증원이 어려워져 사실상 찬밥 신세가 된다. 현재 있는 전문가 기관도 제대로 지원 못 하면서 새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힘
- 국립현대미술관의 간부급 관계자는 “우리 관에서는 기증관이 서울관에 가까운 만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설정하고 미술관 박물관에 적을 둔 컬렉션을 분기별로 순환해 선보이는 상설 전시관 개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문체부 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문체부가 구상하는 ‘수장고+전시장+학예실’ 형태의 융합형 기증관은 기존 미술관·박물관 관리체계와는 별개의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뛰어넘는 더 시설과 직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임. 이는 기존의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며, 기존 시설과 이견희 기증관의 위상과 정체성에서 혼란 야기
  
- 문체부의 송현동 이견희 기증관 계획 발표 이후, 이견희 기증관에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모든 기증품을 인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 국립현대미술관, ‘조사연구를 완료한 기증작품들은 2027년 목표로 설립되는 (가칭)이견희 기증관에 인계한다. 이후 (...) 소장품 관리 및 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미술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고 이 회장 기증품은 1946년 이래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증받은 문화재의 약 60%에 달하는 양으로 (...) 새로 개관하는 이견희 기증관에 추후 전량 인계될 예정이다.’
- 고 이견희 유족 측은 기증당시 기증처로 국립중앙박물관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 광주시립미술관(30점), 전남도립미술관(21점), 대구미술관(21점), 양구 박수근미술관(18점), 제주 이중섭미술관(12점)을 정함
- 유족 측의 동의 없이 기증품을 다른 신설기관에 기증하는 것에 대해 문체부 측은 “삼성가가 국가에 기증한 것이므로 국립기관의 소장처 이관은 아무 문제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소장처를 이관하는 절차나 협의 과정,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되지 않음
- 또한, ‘이견희 컬렉션’이라는 특정 인물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박물관·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음. 특히 문화재 중심의 박물관과 미술품 중심의 미술관이 동일인물이 기증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시설에 소장되는 것은 시설의 정체성 및 목적이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유5\_시민의 공간으로서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와 충돌

- 송현동 부지는 지리적으로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잇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 지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왕실 종친들의 주택과 왕실의 사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궐을 포함한 궁중문화의 연장공간으로 볼 수 있음
- 일제시대에는 조선식산은행의 사택부지로 이용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터로 이용되는 등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픔과 함께 해온 공간. 이후 송현동 부지가 한국으로 반환되면서 국방부 소유가 되었으나 2002년 삼성생명이 이 부지를 매입한 후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다시 매입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즉, 송현동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궁중문화의 중요 공간이었고, 근대에는 우리나라의 굴곡의 근대사를 함께해온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상징하고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송현동 부지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기증품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송현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반하는 것임
- 또한, 광화문에서 송현동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2002년 월드컵,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혁명 등 시민들의 힘과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왔던 시민들을 위한 공간임
- 그런 점에서 송현동 부지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과정의 결과로서 송현동 부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이유6\_관광수입창출을 위한 경제적 효과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

- '국가 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방안'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원칙 중에 하나로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들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외국의 우수 박물관(루브르 박물관, 대영박물관)과 같은 인지도 높은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통해, 광화문-송현동 일대를 부가가치창출 및 상업적 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조성(워싱턴DC의 내셔널몰, 베를린의 박물관섬 등)

○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동은 경복궁, 광화문 광장, 서울공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북촌인사동이 인접해 있어 기증관 건립의 최적지”라며, “기증관 건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세계적인 역사 문화관광지대(벨트)로 발전하고, 서울이 세계 5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광화문-송현동 일대에 대한 다양한 맥락과 가치들이 상업화라는 명분에 의해 묻혀버리는 부정적 효과를 만들고 있음

○ 송현동 부지 선정과정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상업화의 한계가 드러남

○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에 대한 입지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를 진행

○ 하지만, 연구에서 입지분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계층화 분석(AHP)을 통해 ‘장소성’, ‘문화예술 연계성’, ‘접근성’, ‘부지 활용성’, ‘경관 및 조망성’ 등 6개 기준을 선정

○ 송현동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쟁점, 시민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고려보다는 기증관의 입지 조건만 고려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평가 진행

<p>송현동 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p>		<p>용산 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p> 
특징	항목	특징
조선 시대 이후 정치, 경제,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며 관련 인프라 발달	장소성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용산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19.91%		6.44%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 인사동 등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활동 가능	연계성	국립중앙박물관 및 향후 용산공원 조성과의 연계한 국가대표 박물관 단지로 발전 가능
18.11%		6.48%
종로구 내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도보,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진입로 추가 매입 필요
16.62%		5.63%
대지면적 : 37,141.6㎡ 중 9,787㎡ 문화시설로 결정 시 건폐율 60%, 용적률 150%	부지 활용성	대지면적 : 295,551㎡ 건폐율 20%, 용적률 50%로 가용 건축면적 협소
6.56%		2.36%
인근 부지가 도심 공원으로 조성예정이며,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음	경관 및 조망성	인근이 아파트와 철길로 둘러싸여 있고, 건립위치가 국립중앙박물관 동측 끝에 치우침
5.67%		1.93%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가 큼 서울시 부지 취득 절차 진행 중으로 부지확보를 위해 다소 시간 소요	기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의 유입 효과 있음 홍수위로 인한 수장고 확보 문제 있음
6.05%		4.23%
72.93%	중요도 결과	27.07%

## 이유7\_기증품의 검증과정 부재 및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

-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견희 기증품은 11,023건, 2만3천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이뤄져 있다고 알려져 있음. 그 중 일부 작품은 언론보도와 특별전시회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으나, 기증품 전체 목록과 구체적인 작품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기증품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행정이 관리·운영하는 것이고, 국민의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증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
  
- 기증품에 대한 수립경로와 도난품 또는 도굴품인지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함.
- 지난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가가 고가의 미술품 구입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활용해온 사실을 밝힘
- 특검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창고를 압수수색하면서 작품 일부가 공개. 당시 내역서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 하지만, 당시 폭로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법의 모태가 되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윤리강령을 보면 '5항.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음. 이는 소장품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반입 혹은 반출되었다고 믿어지거나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진위 여부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함
- 즉, 합법적 규명이 가능한 출처, 구입 및 소장 경위, 도난 또는 도굴이 아닌 증거와 조사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함
  
-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인력을 투입해 기증품에 대한 등록·조사·연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함
- 하지만 소장품의 양과 동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함.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부족한 인력구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왔고, 최근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으로 기증품이 증가하면서 그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기증품 검증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함
- 세계 예술 업계에서는 예술품 프로비넌스(provenance)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음. 예술품 프로비넌스 제도는 반복되는 위작 시비를 막고 예술가의 권익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 미술품의 영수증 및 판매청구서, 과거 가치평가 관련 서류, 경매 카탈로그, 미술관 및 갤러리 전시 카탈로그, 과거 박물관 또는 기업의 컬렉션일 경우 매각을 재고 번호 등을 미술품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 이유8\_이건희 명칭 사용의 적절성과 삼성 특혜 논란 의혹

-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문화시설에 '이건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이건희라는 인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 컬렉션 수집과정의 의혹, 컬렉션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건희라는 이름이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문체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라는 명칭도 향후 많은 의견을 수렴해 더욱 확장성을 가진 이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 여전히 '이건희'라는 이름이 시설명이나 전시관의 이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음
- 하지만, 삼성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 이후 국민적인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지난 9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70%가 이재용의 사면을 원하는 밝혀짐
- 이러한 삼성에 대한 특혜 의혹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앞에서 서술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는 정부와 행정의 태도는 이러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도록 함. 투명한 논의 과정과 적절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우선되어야 함



[별첨1]

## [성명]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유치 반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10일) 체결한다. 36,642㎡ 규모인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9,787㎡)을 건립하고, '이건희 컬렉션' 2만3181점을 모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중인 서울시가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부지 교환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용산 부지와 송현동 부지 2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한 지 4개월만이다.

○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서, 소나무를 심어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 윤덕영, 윤택영 형제의 집터로 사용됐고, 1920년엔 조선식산은행 사옥으로, 해방 이후엔 줄곧 미국이 대사관 관저로 사용했다. 1997년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1400억 원에 매입했고, 대한항공이 2008년에 2900억 원에 다시 매입해, 23년간 공터로 남아있다.

○ 굴곡진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송현동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1990년엔 서울 덕수궁 선원전 터인 옛 경기여고 터와 등가교환해 대사관 숙소를 이전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로 대사관 숙소를 용산의 미 8군 기지로 옮겨야 했고, 대한항공이 한옥호텔로 개발하려고 할 때도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맞섰다. 이제 와서 줄속으로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결정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가 부지를 무상으로 마련해 기념해야 할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 가치 있는 소장품들은 아직 리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장품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거쳤는지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 시민사회는 송현동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길 바란다. 송현동 부지가 '이건희 컬렉션'을 보관할 장소로 급하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이 충분히 거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별첨2]

## [논평] 원칙도 절차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결정을 반대한다

지난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많은 국민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왔던 (가칭)'이건희 기증관'의 건립터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같은 날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국제설계 공모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은 엄청난 국가 예산과 송현동이라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간이 활용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본인들이 소유한 미술품과 문화재에 대한 기증의사를 밝힌 것이 올해 4월임을 생각하면 기증관 건립 부지 결정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연면적 30,000m<sup>2</sup>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공 미술관 건립에 대한 구상과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끝내 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최근 문화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이라는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미션을 수행하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는 애초에 고려대상도 되지 못했다.

문화부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여 차례의 논의 과정을 통해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국책사업을 단 7명의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논의만으로 결정하는 게 적절하기이다. 전문가 7인의 구성 또한 특정 직군과 분야에 몰려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폭넓은 논의가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문화부 측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조, 6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안이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한 채 공개를 거부했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5조)하거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6조)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했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명단 또한 이미 공개했다. 또한 공공 위원회의 참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문화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송현동 부지 결정 과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부는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건립 후보지인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에 대한 입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송현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장소성, 연계성, 접근성, 부지활용성, 경관 및 조망성과 같은 기증관 입지 조건만 따지고 있을 뿐이다. 공공 문화예술정책과의 연계, 국민과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 공유지로서 송현

동 부지의 가치와 의미 등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오로지 기증관 건립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조사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삼성가의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공공문화시설에 '이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문화예술시설의 수도권 편중 심화로 인한 문화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와의 충돌문제까지 사실상 논란을 덮고 갈뿐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논의과정과 공론화 과정의 부재로 인해 의혹만 키워가고 있다.

'이건희 기증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이러한 차이를 조율하고 좁혀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며, 더욱이 '이건희 기증관'과 같은 국가적 사업이라면 더더욱 피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과정은 민주주의의 질서와 시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문화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중단하고,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2021년 11월 17일

문화연대

[별첨3]

## [기자회견문]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으로 (1)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2)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3)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4)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제시하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마, 설마”했던 내용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시나마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원망할 정도로 끝내 이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최악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삼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관련 논의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전날에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정부 내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부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되자마자 소위 ‘이건희 미술관’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회장님의 고향이라서”, “자주 들렀던 곳이어서”, “경치가 좋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슬로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보급 미술작품이 다수’라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평가와 조사 이전에 이미 환영과 감사 입장을 먼저 밝힌 상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마치 ‘로또’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최악’이라 단정하는 이유는 최종 장소가 서울로 정해져서가 아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는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결정, ‘이건희’라는 이름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일 것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밀리에 운영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논의로만 적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을 결정한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미술관 명칭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별도의 미술관 건립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 기증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 명명하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총 23,181점에 달하는 컬렉션에 대한 활용방안을 7명 전문가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기증자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정책 결정을,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정책 결정을, 비공개 위원회의 10번 회의로만 ‘통쳐서’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부터 시작하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지, 명칭은 또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우선이다.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논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 문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희 컬렉션’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증품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있기도 전해 ‘위로부터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요구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되어 사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최악의 결정이다.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 이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짓겠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부.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정부의 입장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술품의 국가기증과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알아서 반영하는’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앞으로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이건희’는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국보급이 몇 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별도의 의견수렴의 시늬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증품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대로만 진행하면 된단 말인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문화의 공공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활용 관련

한 중장기 계획 등을 모두 젖혀둔 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만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관> 건립은 최악의 결정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관>의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 기증품의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이견희 컬렉션 기증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견희 컬렉션을 이재용 사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2021년 7월 15일(목)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54개 단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마네트상사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협의회녹색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비평그룹 시각,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책자,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식인선언네트워크